

북당진-신당정 송전선로 준공 전력망 확충으로 발전제약 해소

산업부, 21년 만에 본격 가동
전력 추가구입비 3500억 절감
충남 전력망 확충, 산업투자 탄력
산업2차관 “새 패러다임 실현”

서해안 전력망 확충을 위한 북당진-신당정 송전선로가 사업 착수 21년 만에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345kV(킬로볼트) 북당진-신당정 송전선로 사업 준공식 행사 현장에 최남호 2차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당진-신당정 송전선로는 2003년 사업에 착수해 2024년 11월 운전개시까지 21년이 소요됐다. 입지선정과 지자체 인허가가 늦춰지며 준공이 미뤄져왔다.

그간 송전망 확충이 지연됨에 따라 충남 서해안 지역은 발전소의 전력 생산에 차질이 계속돼 왔다. 발전력 대비 송전망이 부족해 발전량에 제약이 걸려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송전망 확충을 계기로 서해안 지역의 발전제약이 일부 해소되면서 연간 약 3500억원의 전력 추가구입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충청과 수도권의 전력인프라가 보강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된 천안·아산지역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345kV 북당진-신당정 송전선로 사업 준공식 행사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남호 2차관은 21년 공사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중대재해가 없었던 점을 높이 평가하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대규모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밝혔다.

최 차관은 “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력망특별법’을 통해 범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전력망 거버넌스와 지역주민 보상·지원의 대폭 확대 등을 통한 전력망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력당국은 앞으로 현장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

이며, 일선 현장에서도 지역주민과 지자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전력망 적기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력당국은 현재 당진지역 내 345kV 규모 당진화력-신송산, 신당진-북당진 송전선로 건설 등을 추진 중이다.

한편 최 차관은 지자체장 등 주요 참석자를 만나 “충남지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력다소비 산업 육성 계획에 전력설비 확충이 필수적이므로 해당 지역의 전력망 확충 사업에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봄철 성어기 대비 中 어선 불법어업 단속

해수부, 오늘부터 15일까지 실시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부터 15일까지 서해 남부와 제주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중국 어선 불법 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성어기와 중국 자체 하계 휴어기(5월1일~9월16일)를 앞두고 우리 수역 내 중국 어선의 무분별한 집중 조업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비밀 어장을 활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축소) 보고, 그물코 규정 위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위·변조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우리 수역 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무단으로 부설된 중국 어선 불법 어구에 대한 감시 및 적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중 간



해수부가 봄철 성어기 대비 중국 어선 불법 어업을 단속한다.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고, 앞으로도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 어구 강제 철거 등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희석 기자 vbkim11@

환경부, 국제 물정책 기준 마련한다

‘국가 물평가 이행지침’ 발간

환경부가 ‘국가 물평가 이행지침’을 유네스코(UNESCO)와 공동으로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달 중 공개 예정인 이발행물은 국제사회 물 정책 결정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네스코 회원국 대상의 물평가 이행지침은 종합적인 국가 물평가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을 수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침 작성을 목적으로 의제 구성 단계부터 유네스코 선도국가 그룹에 참여해 왔다. 한국은 지난 2023년 유엔 물 총회에서 주도적 참여 의지를 표명한 뒤 지난해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선도국 지위에 오른 바 있다. 이번 공동 발행물은 유네스코 ‘정부 간 수문 프로그램 한국위원회 누리집’에 이번 주 내로 공개될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또 국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물과학 보고서’를 올해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안으로 시범적으로 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네스코 회원국을 대상으로 물평가 방법론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유네스코는 오는 2032년까지 ‘물과학 보고서’의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발간하는 이행지침이 그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 7년 뒤 공개될 물과학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수질, 수문, 생태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산업부 대형 온라인쇼핑몰 ‘단위 가격’ 표시제

즉석밥, 즉석죽 등 가공식품과 손세정제, 마스크 등 잡화품목이 단위가격 표시품목에 새롭게 추가된다. 또 대형 온라인쇼핑몰에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1년 유예기간 후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3월 종료됨에 따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오는 7일 고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작년 10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이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절차를 거쳤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품목을 기존 84개에서 114로 확대하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된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쇼핑몰까지 적용하는게 골자다.

이에 따라 이육식,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과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품목 등 30개가 새롭게 단위가격 표시품목에 추가된다.

다만, 상품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표시단위 표기가 어려운 경우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세종=한용수 기자

첨단산업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산업부, K-Tech Pass 프로그램 시행
반도체 등 30여개 기업 대상 설명회

첨단산업 분야 국내 취업한 외국인에게 배우자의 취업을 허용하고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K-Tech Pass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K-Tech Pass 프로그램은 우수 해외인재에게 탐티어 비자(최우수인재 거주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국내 첨단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경력 보유, 1인당 GNI(국민총소득) 3배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탐티어비자(F-2)가 발급되는데,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내 신속발급, 출입국 우대 카드 제공, 배우자 취업허용, 3년 후 영주(F-5) 전환자격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 정착지원을 위해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의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제도 적용, 금융·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통신 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산업부는 이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 분야 30여개 기업 인사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K-Tech Pass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우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신설된 법무부의 탐티어 비자 안내, 인재 채용 전문기업의 ‘해외인재 유치 노하우’ 특강도 진행됐다.

K-Tech Pass 프로그램 신청 절차 등 상세 정보는 코트라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업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역량 강화

‘공급망 전문가 워킹그룹’ 발족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시화에 대응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공급망 전문가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14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원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작년 7월 공식 출범한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인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 초대 의장국으로서 대외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시화에 대비하기 위해 역대 협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올해 두 차례 위기대응네트워크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공급망 교란 대비 모의훈련 실시, 공급망 정책

및 경험 공유 등을 통해 공조 체계를 정비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2025년도 상세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모의훈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헬스케어, 광물 분야 등에서 훈련이 필요한 공급망 위기 취약 품목을 선별하고, 훈련 방식과 시나리오 개발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자국 우선주의 강화, 공급망 불확화 등으로 공급망 교란 위기가 높아진 이 때, 위기 상황에서 IPEF 회원국간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